

# '1년 공식' 에너지공대 총장 곧 임명

### 대학 총장 출신 여권 정치인사 등 3명 후보... '낙하산 내정' 우려

1년여 공식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총장 선임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차기 총장 공모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대학 총장 출신 여권 정치인사가 포함돼 '낙하산 총장 내정'이 우려된다. 3일 켄텍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켄텍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할 차기 총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이번 제 2대 총장 후보는 현 켄텍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오 연구부총장과, 포항공대 총장을 역임한 김보 씨, 충남대 총장과 국민의 힘 당협위원

장 출신 정모 씨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추천된 총장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을 선임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켄텍 총장에 임명된다. 켄텍 이사회는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연말 현안 처리 등으로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025년 1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제 2대 총장 선임이 정부의 입김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켄텍이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직접 감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대학인 데다, 감사를 비롯한 13명 이사들이 대부분 한전 등 전력그룹사 임원, 정부 부처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도. 특히 여권 출신 인사인 정씨는 경영학 전공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을 선언한 에너지공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안팎에서는 여권 출신 인사가 '낙' 잡'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켄텍은 제 1대 총장이었던 윤의준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산업부 감사 결과로 인해 12월 28일 자진 사퇴한 뒤 12개월째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대법원 5·18유공자 손배 판결 환영"

### 김영록 전남지사 "당사자·유족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3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광주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보다 최대 4배 가량 많은 위자료를 인정한 서울법원의 판결(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이 확정 된 것이 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긴 세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총 430억 여원을 지급하고 정부에게 명령했다. 서울법원은 그동안 광주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보다 최대 4배까지 많은 액수를 인정했다. 한편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제45주년 기념식과 남도 오월 문화제, 학술토론회 등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청소년 술·담배 안돼요 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 북구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한다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철도노조 5일 총파업 예고...KTX 호남선 차질 우려

철도노조가 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어 광주·전남지역 철도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5일부터 전국적인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총 파업인원은 노조원 2600명 중 1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원 가운데 필수 유지인원은 1000여명이다. 노조는 화물 운송 분야는 필수 유지인원이 없어 물품 수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철도공사(코레일)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임금체불 해결, 인력감축 중단 및 안전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5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코레일 광주본부 관계자는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협상 타결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

#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2심서 뒤집혔다

### 효력 인정... 학교 측 "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예정대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학교 측은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군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제기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수험생은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해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연세대 측은 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즉시항고해 2심으로 올라갔다. 이날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세대는 이와 별도로 1심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처분취소 신청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날 항고의 받아들여지면서 가처분취소 신청은 실질적 의미가 없어졌다. 학교 측은 취하 등 후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법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항고 인용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한 대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치르겠다고 예고한 추가 시험과 관련해 학교 측은 "이미 공지를 한 만큼 예정대로 불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 "합천 '전두환 공원' 명칭 변경 청원 광주 시민 동참을"

합천 시민단체 8일 광주서 서명운동으로 바꾸고, 이듬해에는 군비를 들여 표지석까지 세웠다. 표지석에는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해 표지석을 세운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운동본부는 공명명칭 변경 운동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합천군 내 여론조사, 지명위원회 심의 회부를 위한 주민 발의 청원 등을 시도했으나, 군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명칭 변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합천군 내에서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합천군의 비협조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아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이번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천군은 2007년 공원 이름을 일해공원

으로 바꾸고, 이듬해에는 군비를 들여 표지석까지 세웠다. 표지석에는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해 표지석을 세운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운동본부는 공명명칭 변경 운동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합천군 내 여론조사, 지명위원회 심의 회부를 위한 주민 발의 청원 등을 시도했으나, 군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명칭 변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합천군 내에서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합천군의 비협조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아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이번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고통의 운동본부 간사는 "오월의 상처가 채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은 오는 15일까지 동수 5만명을 달성하면 의안에 준해 처리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운동본부는 광주 도심에서 국민청원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인쇄된 포스터를 배부해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정읍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 1. 1. 전국 시행]

-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액을 기부하면
-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 ✓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

**기부혜택** ①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② 답례품 제공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품 등)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 기부금액 합산 기준)

※ 10만원 기부하시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어떻게 기부하나요?

**온라인 기부하기!** 간편하고 빠르게! PC, 모바일 모두 가능!

회원가입	기부하기	답례품 받기
1. 고향사랑e음 접속	3. '기부하기' 클릭	9. 정읍시 답례품 클릭
2. 회원가입 (카카오계정 연동)	4. '정읍' 선택 후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6. 답례품 수령 및 주문하기 (문말 배송 무료)

**NH농협은행**  
PC나 모바일에서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 NH농협은행을 방문해주시면 오프라인 납부 및 고향사랑e음 안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09:00 - 16:00) ※ 신분증 지참

지금 기부하기

<고향사랑e음>

### 정읍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4. 11. 15(금) - 12. 20(금)**

혜택 1.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 2. 기부금액 30% 이내 답례품 제공  
★ 추가 치킨기프티콘(100명)

### 고향사랑기금 사업현황

- ✓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 : 7개 권역 통합 보육 프로그램 / 42백만원
- ✓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 : 전용공간 조성·운영 / 25백만원

**정읍시 | 시민소통실 대외협력팀 ☎ 063) 539-5067~8**